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적 효과

이 선 글 선거연수원

본 논문은 2006년 지방선거의 중선거구 도입에 주목하여 신제도도입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정에 정치적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선거결과와 관련해서는 선거구별 의석획득 분포를 경기도지역과 경상도지역을 비교하면서 각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변화의 제도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기초의원선거의 2-3인 선거구에서 전국적 의석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인 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선거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의석독점선거구가 많다. 또한 3인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1석을 차지하는 선거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점선거구나 한 정당이 2개 의석을 점유하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지역별 선거결과를 정당의석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도 2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여 의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매우 높다. 한나라당이 1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하여 의석을 양당이 분점한 선거구는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양당이 의석을 분점한 선거구비율은 전국비율의 5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경상도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중선거구제가 정당간 의석획득구조를 다양화시켜 다당제를 유도하기보다는 한나라당에 의한 의석독점을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인선거구나 3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의석독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는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정당의 지지기반인 경상도지역과 한나라당이 비교우위 지역인 경기도에서 제도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선거구도입

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주제어: 지방선거, 중선거구제, 선거제도, 의석분포, 제도효과

I. 서론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적지 않은 선거제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초의회의 원선거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화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역구 선거와 더불어 비례대표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변화는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구나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 의석경쟁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에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원리나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정도는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제도이자 척도이다. 지방자치의 발달은 중앙-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행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실시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의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행정을 관장하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자 절차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선거 쟁점으로 부상시키는 의제 설정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는 정당이나 이익집단 등은 물론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도입된 것은 1952년이다. 1952년 4월에 시·읍·면의회의 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5월에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최초로 시·읍·면의 장선거가 실시되고, 4년 후 1960년에는 두 번째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1960년 4.19 학생의거와 5.16 쿠데타 발발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후 30년 동안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선거, 6월 20일에는 서울시, 5개 직할시 및 9개 도 지역에서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선거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광역단체장 15명, 광역의회의원 970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기초의회의원 4,541명 등 총 5,756명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8년에 제2회, 2002년에 제3회, 2006년 5월 31일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2006년 실시된 제 4회 지방선거에서는 그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어떠한 대표를 선출하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지방선거 문화를 창출하느냐라는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 변화가 어떠한 선거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우선 선거권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되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적용되었다. 선거구제도의 경우 시군구 기초단체 의회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과정이나 선거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선거구 도입에 주목하여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정과 정치적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선거결과와 관련하여는 선거구별 의석획득 분포를 경기도지역과 경상도지역을 비교하면서 각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변화의 제도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II. 2006년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변화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신설된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당이 입후보자를 내세울 때는 후보자 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후보의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 시에는 등록이 무효화 된다. 반대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 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와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선거법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개정 이전에는 당내경선에 불복한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경선 결과에 불복한 경우, 당해 선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입후보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당내경선(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초의회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에 낙선한 사람은 다른 선거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입후보가 가능하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와 관련해 또 하나의 커다란 제도 변화의 하나는 선거구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화한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인구 3만명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예외적으로 2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선거구제의 도입으로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는 1,027개로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2인 선거구가 607개, 3인 선거구 381개, 4인 선거구는 39개로 결정되었다. 한

국의 선거에서 중선거구가 도입된 경험은 1973년 제 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되어 1985년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된 선례가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으로 여타 비례대표구제와 마찬가지로 여성할당제가 적용된다. 정치관계법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 후보자의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 시는 등록 자체가 무효화 된다(정당법 52조).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활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선거에 따라 다르다. 새롭게 신설된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어깨 띠, 후보자 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 허용되었다.

이번선거에서 선거법개정으로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6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기초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3표를 행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3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유급화 등의 영향으로 등록 후보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등록된 후보자 수는 12,227명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입후보한 전체 후보자 10,918명보다 1,309명이나 많은 숫자이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수는 66명, 기초단체장 848명으로 이는 지난 2002년 55명, 750명을 상회한 숫자이다.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수는 2,279명으로 전체 정수 733명의 3배를 넘는다. 기초의원 후보자도 9,020명으로 2002년의 8,373명보다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였다. 2006년 기초의회의원 수는 2002년 3,485명에서 2,513명으로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후보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지역의 경우, 광역의회의원선거 10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과 비례대표에서 11명을 선출하였는데 지역구에서 352명, 비례대표에서는 32명이 입후보하여 총 384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기초의회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3명, 선거구에서 364명을 선출하였으나 후보자는 전체 1,290명으로 지역구 1,141명, 비례대표 149명이다. 기초의회 경쟁률은 3.1대 1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는 500명 당선에 1,228명이 입후보

하여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 경쟁률은 상승하였다.

III. 중선거구제 도입과 의원정수 결정의 정치과정

선거제도는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이며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제도나 선거구제 변경에는 정치사회의 많은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정당간의 대립과 타협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특히 선거제도는 정당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기초의원선거에 도입되었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중간적인 형태로 대략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 내지 6명 정도를 선출한다. 중선거구제는 유권자에게 적정한 수의 선택대안이 제공되고 선거구안의 다양한 이익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지역적으로 넓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금권타락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5.31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게 되므로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복수로 입후보하여 정당 간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이익 유도 경쟁에 빠질 우려가 존재한다. 중선거구제의 폐단은 일본선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 획정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고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시·군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의회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선거 중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 지역구에 중선거구

제,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선거구수와 의원정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시·도 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변경은 주로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계룡, 증평선거구가 증설되었다. 그 대신 제주도는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되면서 4개가 감소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1인 선거구가 46개 증가하고 비례대표선거구에서 정수가 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51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수 감소와 의원정수 조정은 중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변화이다. 먼저 선거구수 변화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3,459개 선거구가 존재하였으나 이번에는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1,028개로 조정되어 지난 선거보다 2,431개 감소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수가 13개 증가하였다. 의원정수 증가는 지역구에서 14명, 비례대표에서 1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기초의원선거에서 선거구수는 2002년과 비교하여 348개 감소하였고 의원정수는 83명이 감소하여 전체 417명이 선출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보면, 2인 선거구가 80개, 3인 선거구가 68개를 차지하였다. 타 지역과는 달리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에는 4인 선거구가 9개 확정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의회 조례 성립과정에서 4인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로 분리되었다.

구·시·군 의회의원 정수는 전체 2,888명으로 597명 감소하였다. 전체 의원 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구의 비율을 보면 지역구 의원 정수는 2,513명이고 새롭게 신설된 구·시·군 의회의원 비례대표구 의원은 375명이다.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구는 1인 선출 구가 117개, 2인 선출 선거구는 86개, 3인 선출 선거구는 22개이다.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5개이다. 4인 선거구는 경기도 지역의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3곳이며,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모두 5곳이다.

구·시·군 의회의원 정수는 전체 2,888명으로 597명 감소하였다. 전체 의원 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구의 비율을 보면 지역구 의원 정수는 2,513명이고 새롭게 신설된 구·시·군 의회의원 비례대표구 의원은 375명이다.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구는 1인 선출 구가 117개, 2인 선출 선거구는 86개, 3인 선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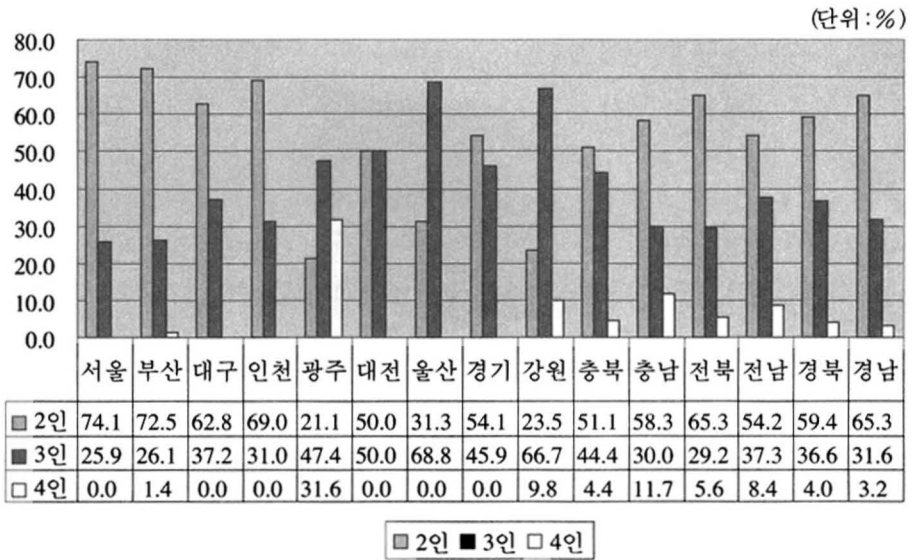


그림 1. 2006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거구는 22개이다.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5개이다. 4인 선거구는 경기도 지역의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3곳이며,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모두 5곳이다.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전체 610개로 59.3%, 3인 선거구는 379개로 36.9%, 4인 선거구는 39개로 전체 선거구의 3.8%를 차지한다.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4인 선거구 시도별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가장 많아 전체 선거구 중에서 31.6%가 4인 선거구이다. 그 다음이 충남, 강원 순이다. 인구특성상 대도시 지역에서 4인 선거구가 다수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 확정 및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의회는 조례로 선거구를 확정한다.

기초의회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고 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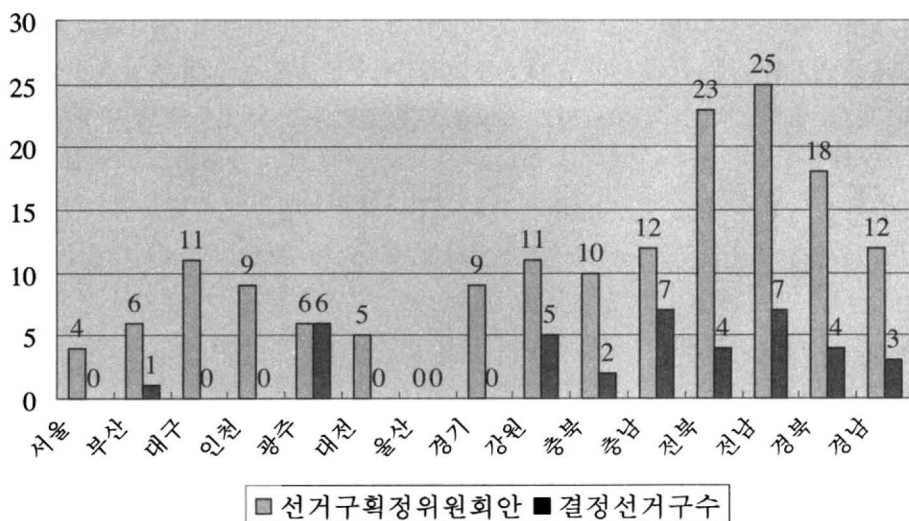


그림 2. 4인선거구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안과 결정선거구수

구·시·군 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차치구·시·군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 2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많은 시도에서 4인 선거구가 2인씩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그림 2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수의 각 지역별 분포와 실제 각 시도에서 조례로 결정된 선거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애초 제안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숫자와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도별로 4인 선거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에서 전체 4인 선거구는 160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례로 확정된 4인 선거구는 39개에 불과하다. 원안의 24.4%만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분할되어 2인 선거구로 전환되었다.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안에는 서울 4, 대구 11, 인천 9개의 4인 선거구가 존재했다. 부산은 6개 중에서 1개, 경기도 원안에는 9개였으나 결국은 모두 분리되었다. 광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4인 선거구는 모두 분할되었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 12월 24일 새벽 5시 50분에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4인선거구 11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 처리하는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도 2005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처리 하였다. 같은 23일 충북 도의회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4인 선거구 10곳 중 9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강행처리하였다. 전남도의회도 12월 23일 애초 25개 선거구를 7개로 줄이는 시군 선거구와 선거구 정수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의회도 2005년 11월 10일 4인 선거구 9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4인 선거구의 분할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의회에 소수정당의 진출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래취지와는 달리 정치과정에는 기존 기초의회 의원들의 기득권과 거대정당들의 의석 독점이라는 정략적 접근이 우선한 결과라고 보인다.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과 같이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에서 의석 독점이 가능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4인 선거구의 나뉘 먹기식 선거구 분할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구 분할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기도지역의 경우도 원안에 포함된 4인 선거구 9개가 조례제정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IV. 중선거구제 도입과 제도적 효과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4인 선거구는 전국에 걸쳐 39개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2~3인을 선출하였다.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구를 지방정치에 반영하고 정당공천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더구나 중선거구제는 그 지방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선거구제는 지역주의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표 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별 당선결과

구분		합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 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무소속
계		3,872	702	2,345	378	81	89	277
시·도지사		16	1	12	2	-	-	1
구·시·군의 장		230	19	155	20	-	7	29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3	519	71	5	13	14
	비례대표	78	19	38	9	10	2	-
	교육의원	5	-	-	-	-	-	5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543	1,401	233	52	56	228
	비례대표	375	87	220	43	14	1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별 당선결과를 보면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를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지역구에서 55.8%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비례대표구에서도 한나라당은 전체의석의 58.7%를 획득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서 21.6%, 비례대표구에서는 23.2%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9.3%, 비례대표구에서 11.5%를 확보하여 비례대표구의석이 지역구의석을 상회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1%, 비례대표구에서는 3.7%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의원은 지역구에서 9.1%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1. 경기도지역의 선거구별 의석분포와 선거제도 효과

경기도지역 구시군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지역구에 주목하여 전국 의석율과 경기도 지역의 정당별 의석분포를 살펴 본 결과가 그림 3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전국에서 전체 2,513개 의석 중 21.6%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경기지역에서는 28.3%를 획득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전국에서 55.7%를 차지하였으나 경기지역에서는 67.3% 의석을 차지하였다. 전국 의석율보다 경기지역 의석율이 무려 11.6% 높다.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차지한 영향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2.1%와 1.9%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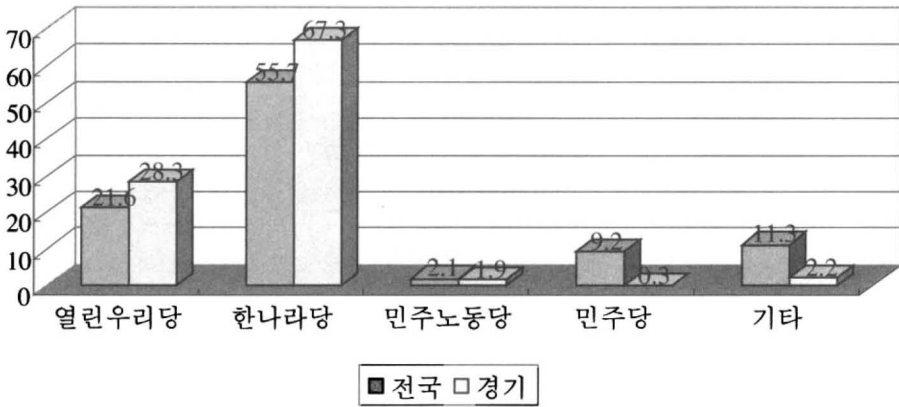


그림 3. 구시군의원선거 소선거구 정당별의석 비교

에서 9.2%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경기지역에서는 0.3%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민주당이 전남, 전북, 광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의석을 차지한 결과이다. 기타 정당의 결과도 경기지역에서는 무소속 당선자 수가 적으므로 전국과 경기도 지역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교결과를 보면, 경기도 지역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의석 결과를 선거구 정수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그림 4는 5.31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별 의석분포를 정당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2는 독점 선거구의 분포를 정당별로 지역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우선 이 분석결과를 보면, 2인선거구에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독점 선거구 중에서도 한나라당의 독점 비율은 87.2%를 나타내어 거의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2석 모두를 독점한 선거구는 9개, 민주당은 21개 그리고 무소속이 2석 모두를 차지한 선거구는 4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에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기반지역에서 의석 독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인선거구에서 2개 정당이 의석을 1석씩 분점한 선거구 비율은 전체 56.6%로 나타나 과반수를 약간 넘어서고 있다. 2개 정당이 의석을 1석씩 분점한 선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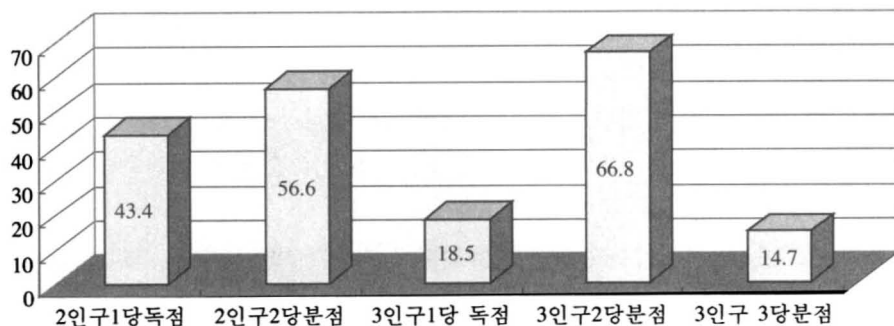


그림 4. 구시군의원선거 선거구별 의석분포

표 2. 2~3인 선거구에서 정당별 의석독점 분포

	2인구				3인구		
	한나라당 독점	열린우리당 독점	민주당 독점	무소속 독점	한나라당 독점	열린우리당 독점	민주당 독점
서울	37	0	0	0	1	0	0
부산	44	0	0	0	7	0	0
대구	27	0	0	0	13	0	0
인천	8	0	0	0	0	0	0
광주	0	0	2	0	0	0	0
대전	0	0	0	0	3	0	0
울산	0	0	0	0	1	0	0
경기	28	0	0	0	8	0	0
강원	3	0	0	0	7	1	0
충북	8	0	0	1	0	0	0
충남	8	0	0	1	1	0	0
전북	0	9	3	1	0	0	0
전남	0	0	16	1	0	0	5
경북	31	0	0	0	14	0	0
경남	37	0	0	0	7	0	0
합계	231	9	21	4	64	1	5

패턴을 살펴보자. 우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석씩 분점한 선거구가 52.8%를 차지하여 2개 정당이 의석을 1석씩 분점한 선거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한나라당과 무소속후보가 분점 한 비율이 14.8%,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의석을 1석씩 분점한 선거구가 10.7% 순이다. 열린우리당과 무소속간의 분점, 기타 패턴 등도 다수 존재한다.

3인선거구에서는 1당이 3석 모두를 독점한 선거구가 18.5%이다. 그리고 3인선거구에서 2정당이 3석을 분점 한 선거구는 전체 3인선거구의 66.8%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3개 정당이 3석을 1석씩 차지한 선거구 비율은 14.8%이다. 1당 의석 독점 선거구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3석을 독점한 선거구이다. 열린우리당 1개 선거구, 민주당 독점 선거구 5개에 불과하다. 3인선거구에서 2개 정당이 3석 차지한 선거구 패턴, 즉 어느 한 정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 정당이 1석을 차지한 선거구 패턴 중에서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석을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등이 차지한 패턴이 74.7%를 차지한다. 열린우리당이 2석을 차지한 선거구는 15.0%,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한 선거구는 10.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경남, 경북 지역에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강원, 전북, 전남, 광주지역 등에 다수 존재한다. 민주당이 2석 나머지 1석을 다른 정당이 차지한 패턴은 전남, 광주, 전북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각각 1석씩 차지한 3개당 분점 패턴은 3인선거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4석을 독점한 선거구가 경북지역에 1개 선거구, 민주당은 전남지역에서 1개 선거구에서 4석 모두를 독점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4인선거구에서 3석을 획득하고 나머지 1석을 다른 정당이 차지한 선거구도 전남, 전북 지역에서 각각 1개 선거구씩 존재한다. 역시 4인선거구에서는 3개 정당 이상이 4석을 차지한 선거구가 많다.

이번 5.31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되고 선거구 정수 분포가 2~3인 선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3인 선거구에서 의석분포를 분석한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1개 정당이 선거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의석 독점선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인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1석을 차지하는 선거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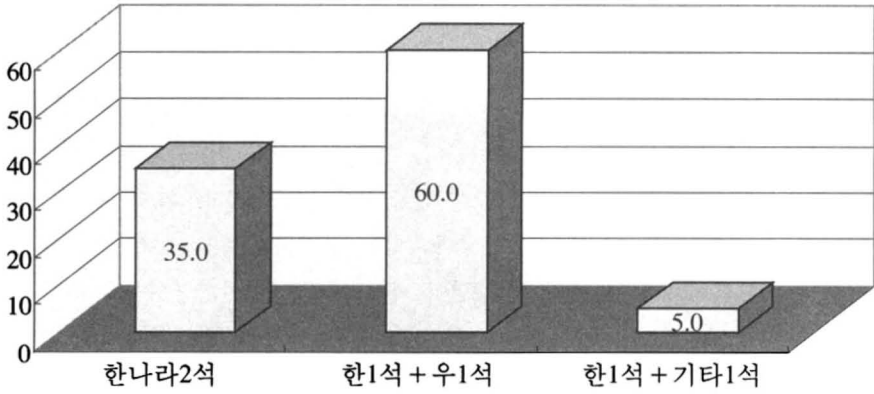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지역의 2인선거구 당선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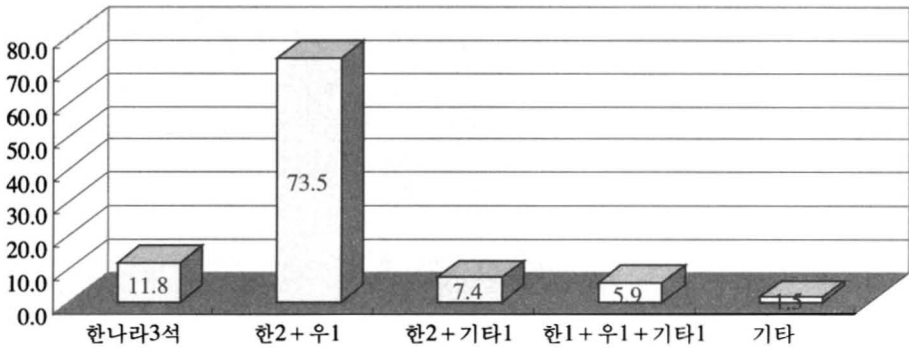


그림 6. 경기도지역의 3인선거구 당선자분포

구나 2개 의석점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선거구별 의석분포를 정당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경기도지역의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에서 의석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역에서는 구시군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2인선거구 80개, 3인선거구 68개가 도입되었다. 경기지역의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선거구에서 160명, 3인 선거구에서 204명으로 전체 364명이 당선되었다. 여기에다가 비례대표구에서 53명이 선출되었다.

비례대표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3명, 한나라당이 38명, 민주노동당이 2명 당선되었다.

경기지역 2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여 의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2인 선거구 43.4%와 비교하면 낮은 숫자이다. 한나라당이 1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하여 의석을 양당이 분점한 선거구는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양당이 의석을 분점한 선거구비율은 전국비율의 5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1석,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기타정당이 1석을 차지한 비율이 5%로 나타났다.

3인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이 3석 모두를 차지한 의석독점 선거구가 11.8%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국의 18.5%보다 낮다.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석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선거구는 73.5%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인선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한나라당 2석, 열린우리당 1석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2석, 기타정당이 1석을 차지한 선거구는 7.4%이다. 마지막으로 3당이 1석씩 의석을 분점한 선거구는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인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상도지역의 선거구별 의석분포와 선거제도 효과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 목적에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제도적 효과는 어떠했을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상도지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에 주목하여 고찰한다.

우선, 그림 7은 경상도지역의 중선거구제 당선된 의석을 정당패턴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중선거구는 2인선거구 204, 3인선거구 112 그리고 경기도지역과는 달리 4인선거구가 8개 존재하였다.

2인선거구 중에서 1개 정당이 2의석 모두를 독점한 선거구는 69.1%이다. 그리고 2개 정당이 1석씩 의석을 분점한 선거구는 31.9%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2인선거구에서 의석의 거의 독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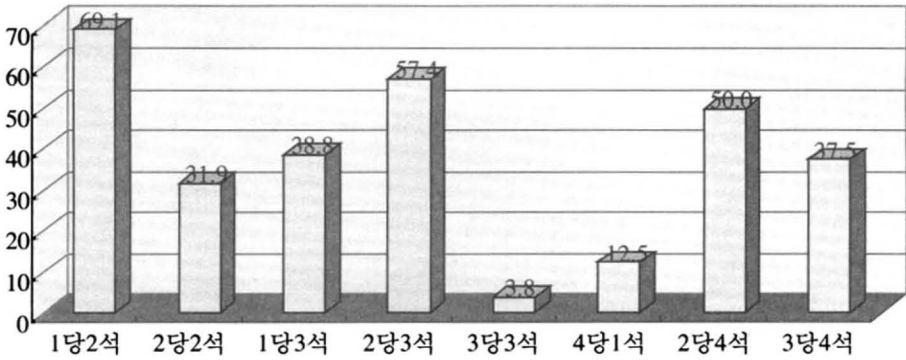


그림 7. 경상도지역의 선거구별 의석분포(전체)

3인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3의석 모두를 독점한 선거구는 38.8%이다. 그리고 2개 정당이 3의석을 차지한 선거구는 57.4%로 3인선거구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그렇지만 3개 정당이 1석씩 의석을 차지한 3당 3석 패턴은 3.8%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석수가 많아져도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수가 많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인선거구에는 1개 정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한 선거구가 12.5%이다. 2개 정당이 4석을 차지한 경우, 즉 1개 정당이 3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석을 다른 정당이 차지하거나 2개 정당이 2석씩 차지하는 패턴이 50%, 마지막으로 3당이 4석을 차지하는 패턴이 37.5%로 나타났으나 4인선거구에서 4개 정당이 의석을 1석씩 차지하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다. 4인선거구에서도 역시 다당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8은 2인선거구의 의석획득구조를 정당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한나라당이 2석 모두를 독점한 선거구가 가장 비율이 높아 69.1%이다. 그 다음이 한나라당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한 선거구가 19.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1석 나머지 1석을 우리당이 차지한 비율이 5.9%, 민노당이 차지한 선거구가 3.5%이다. 2인선거구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선거구는 2.5%에 불과하므로 한나라당의 의석독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9는 3인선거구 의석을 정당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3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3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37.5%이다. 2인선거구보다는 비율이 감소하여 여전히 3인선거구 의석패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이 한나라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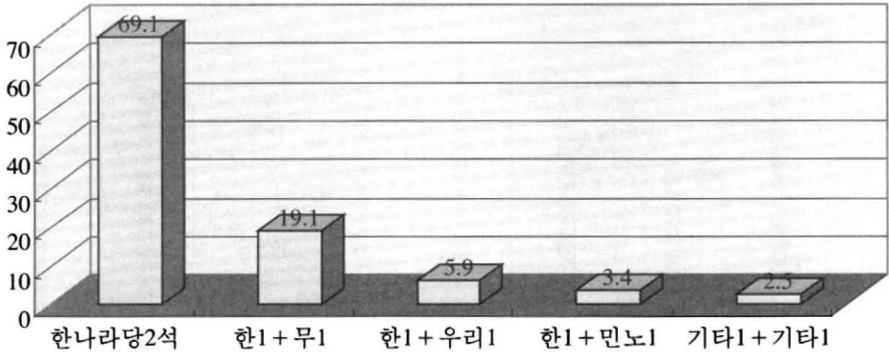


그림 8. 경상도지역의 2인선거구 의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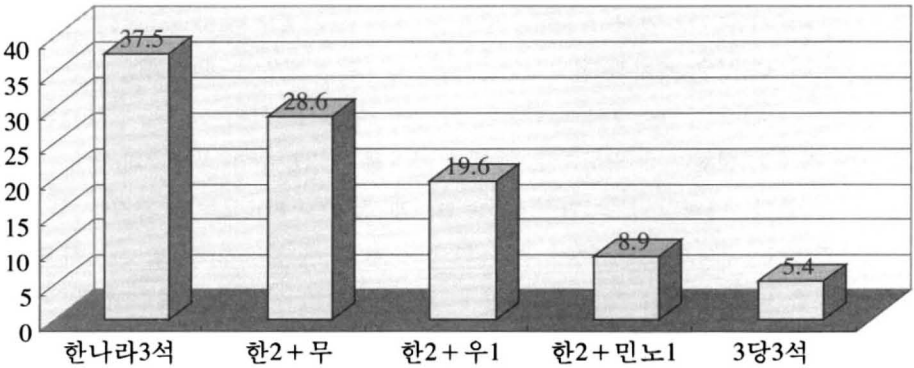


그림 9. 경상도지역의 3인선거구 의석분포

2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는 패턴이 28.6%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2석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한 패턴은 19.6%이다. 한나라당 2석과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하는 선거구는 3인선거구의 8.9%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3인선거구에서 3개 정당이 1석씩 차지하는 선거구는 5.4%에 불과하다. 역시 경상도지역의 3인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의 의석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석수가 증가하여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의석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4인선거구에서의 정당패턴을 분류한 결과이다. 한나라당이 4인선거구에서 4석을 독점한 비율은 12.5%이다. 한나라당이 3석 우리당이 1석을 차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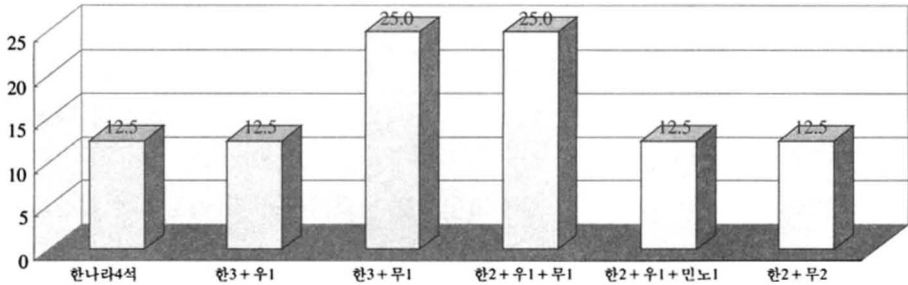


그림 10. 경상도지역의 4인선거구 의석분포

선거구는 12.5%, 무소속이 1석인 선거구는 25%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2석을 다른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50%로 나타났다. 4인선거구에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간 의석획득패턴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상도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중선거구제가 정당간 의석획득구조를 다양화시켜 다당제를 유도하기보다는 한나라당에 의한 의석독점을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인선거구나 3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의석독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3인선거구나 4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의석점유 비율이 높은 것을 본다면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는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정당의 지지기반인 경상도지역과 한나라당이 비교우위 지역인 경기도에서 제도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2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여 의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전체의 35%를 차지하였으나 경상도지역에서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1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하여 의석을 양당이 분점한 선거구는 전체의 60%로 나타났으나 5.9%에 불과하다. 양당이 의석을 분점한 전국비율 56.6%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3인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 의석 독점비율이 11.8%에 불과하나 경상도지역은 3배이상 높다. 한나라당2석 우리당 1석의 비율도 73.5%와 19.6%로 3배 이상 낮다. 이러한 결과는 중선거구제도가 경상도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의석획득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이외에도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선거구제 도입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기초의회인 구시군의원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변화되면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각 선거구의 석이 2석 내지 3석으로 늘어났다. 중선거구제는 의석을 획득하는 정당 수를 늘리게 된다. 그러므로 약소정당에게도 의석획득의 기회가 늘어나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 의석이 늘어나면서 한나라당의 의석점유가 늘어났다. 2인선거구에서 의석독점 선거구의 비율은 높은 것은 물론 3인선거구에서 3석 독점 선거구와 2석을 차지한 선거구 비율이 73.5%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중선거구제 도입은 한나라당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상도지역에서 한나라당은 제도적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확인된다. 그리고 앞 장에서 살펴본 의원정수결정이 4인 선거구에서 2인선거구로 분할된 결과는 의석독점 선거구를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특정 정당이 지지기반 지역에서 선거구 정수 분할을 시도하고 그 결과 2인 선거구의 증가는 지지기반지역에서 의석 독점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선거제도의 이점으로 많은 초과의석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도 전남, 전북 지역에서 선거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선거구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구를 지방정치에 반영하고 지역주의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도입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제도 변화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되었고 각 선거구마다 정수 2~4인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은 정수만큼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가 많아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당선자의 분포를 보더라도 선거구 정수에 따라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3인 선거구에서 전국적 의석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인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선거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의석독점선거구가 많다. 또한 3인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이 2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1석을 차지하는 선거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점선거구나 한 정당이 2개 의석을 점유하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2인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여 의석을 독점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매우 높다. 한나라당이 1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하여 의석을 양당이 분점한 선거구는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양당이 의석을 분점한 선거구비율은 전국 비율의 5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지역 3인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이 3석 모두를 차지한 의석독점선거구 비율은 전국분포보다는 낮았다. 3인선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한나라당 2석, 열린우리당 1석이다. 이러한 패턴은 경기도지역 3인선거구의 73.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3인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기도지역에서는 거대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이득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운동의 변화도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구내에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간 후보자 경쟁이 나타났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각 후보자간 지지기반과 활동기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어 정당의 선거 지원은 선거비용보다는 정당이 보유한 지역 네트워크나 정책지원을 통한 운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자나 시장후보자도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을 전개한다.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은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계열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시장후보자,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 그리고 비례대표후보자로 이어지는 후보자간 연계관계가 선거과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보였다. 단순한 선거구 영역의 확대나 유권자 수 증가보다도 같은 정당 후보자끼리도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에 대한 전략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선거구 정수만큼 후보자를 입후보시키다보니 득표와 당선 간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과소대표의원도 속출하게 되었다.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자 수 조정을 통한 당선극대화 문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선규. 2006.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금창호. 2002. "6. 13 지방선거의 특성과 과제." 『지방자치』 8월호.
- 김성호. 2006.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관여방식 개선." 제36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발표논문.
- 김순은. 2001. "지방자치와 정당." 『월간자치행정』 6월호.
- 김 욱. 2006. "지방선거와 투표참여: 선거의 유형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2006년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형준. 2006. "한국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비교·고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2006년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소순창. 2002. "한국지방선거에 있어 지역할거주의와 정당투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집 3호.
- 신두철. 2006.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방안." 한국선거학회 2006년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안청시·손봉숙. 1986. "한국의 지방선거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20권 1호.
- 주용학. 2006.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정치적 중립."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춘계학회발표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06. 『법률(소비자)연맹 회원 대상 공직선거제도 안내』.

황아란. 2006. “한국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정당 경쟁을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2006년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제2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2005. 12. 2).

제2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05. 12. 6).

ABSTRACT ■ ■ ■

Electoral Politics and Multi-Member Districts in 2006 Local Election

Seon-gyu Go | Electoral Training Institute

This paper analyzes political effects of the adoption of the new election system, with an emphasis on Multi-Member Districts in the 2006 local election. First, we analyze redistricting process, political results i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sized District System. In relation to election results, we intend to examin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mong parties by comparing Gyeonggi province with Gyeongsang province through distributions of winning seats. Finally, we also analyze institutional influences or effects of change on an electoral system. National distribution of assembly seat in two-three council members, the local councilor elect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monopoly of assembly seat constituencies which one party keeps all of assembly seat in two council members. And in three-member one, there are more than 60% which are constituencies that one party has 2 seats, the other party having 1 seat, of all other constituencies;? The Grand-National Party has the most seats, with the monopoly of a constituency or a constituency in which it holds 2 seats. Local election results according to an analysis show that party seats in the Gyeonggi-do area, there is a monopoly constituency? the Grand National Party has all seats in two council members - and 35% of all two-member ones. Constituency divided evenly? with the Grand National Party having 1 seat, Uri Party having 1 seat ? makes up 60% of all constituencies. This ratio is higher than the national ratio of 56.6%. These results of the Gyeongsang area tell us that medium-constituency does not lead to multiparty system by a winning seat structure among parties but rather a promotion of monopoly of seats by the Grand National Party. In two?member councils

or three-member ones, the ratio of monopoly seats by the Grand National Party is very high. In view of the results thus achieved, the redistricting process- four-member councils dividing into two-member ones - may be effective. This election informs us that political effect of the Medium-sized District System is very different by regional political conditions. Institutional effect is seen very differently in the Gyeongsang area, which gives it comparative advantage. Considering the regional political condition that most areas gain comparative advantage except for the Jeonnam area, adoption of the Medium-sized District System may take a favorable turn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Keywords: local election, multi-member districts, electoral politics, electoral system, institutional influences